

<b>코스피</b> 2380.34 (+12.02)	<b>코스닥</b> 712.89 (+1.14)
<b>금리</b> (연이자율) 3.248 (-0.142)	<b>환율</b> (원/달러) 1232.10 (-5.30)

[다보스포럼]  
‘1호 영입사원’  
자처한尹대통령  
0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 /소방청

1년간 산업현장 사망자 644명 처벌은 0건

## 처벌 없는 중대재해법 예방법으로 개정 추진

50인 이상 사업장 256명 사망 전년 보다 되레 8명 늘어나

산재예방·감축 실효성 의문 모호한 기준에 혼란만 가중

처벌 위주 명칭도 부정적 인식 ‘예방’ 용어 넣어 기준 등 개편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범명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명칭이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을 주는데다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란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를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노사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용어, 처벌 기준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건은 총 229건,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

은 11건뿐이다.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법적 취지와 달리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총 6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39명(5.7%) 감소에 그친 셈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했는데 전년(248명)보다 되레 8명(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DL이앤씨, HDC 등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20명)보다 5명 늘었다.

아직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도 38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1명(53.0%)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71명(26.6%), 기타 업종 132명(20.5%) 등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했다.

때문에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과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모호한데 처벌만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4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M-커버스토리

## 外人 매수에 코스피 9거래일 연속 상승

‘1월 효과’ 꿈꾸는 개미들

18일까지 외국인 3.4조 순매수 특별한 이벤트·펀더멘털 없어 전문가들 “보수적 투자” 주문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기본 좋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통상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초입의 반짝 장세로 보며 오히려 보수적 투자 관점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5면>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증가 대비 4.70

포인트(0.20%) 오른 2373.5에서 장을 마쳤다. 지난해 연말에는 2200대에서 마감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장중 한때 2180.67내리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4일부터는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지난 16일에는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현재 230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상승세의 배경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오면서 수급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초 이후 이날까지도 코스피에서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8일까지 총 3조4692억

원을 순매수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3조1819억원치를 팔면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장 초반 하락했지만 오후부터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전일 대비 상승한채 마무리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라면서도 “상승 요인은 특별한 이벤트나 펀더멘털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혼자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일 증가 대비 800원(1.32%) 오른 6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면에 계속>

/이영석 기자 ysl@



귀성길 오르는 시민들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귀성길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 BNK금융 차기 회장에 빈대인 前은행장 확정

BNK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빈대인 전(前) 부산은행장(63·사진)이 내정됐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모처에서 1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모(63) 노티인베스트먼트 부회장, 빈전 부산은행장, 안감찬(59) 부산은행장 등 3명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상대로 심층 면접을 했고 빈 후보자를 차기 회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관련기사 8면>

1960년생인 빈 전 회장은 1988년 부산은행 입행해 북부영업본부장, 경남 지역본부장(부행장보), 신금융사업본



부장(부행장), 미래채널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부터 3년여간 부산은행장을 지냈다.

빈 전 회장은 경남 남해군 출신이다. 부산 동래원예고, 경성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BNK금융그룹 내 파벌논란에서 자유롭다는 평을 받고 있다. BNK금융은 이장호, 성세환 전 회장 등을 거치면서 출신학교(부산상고와 부산대, 동아대)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됐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임추위 위원들은 빈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

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 경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지방은행 최초로 모바일 전문은행 ‘썸뱅크’를 출시하며 디지털 금융을 주도한 바 있다.

또 지난 2017년 성세환 전 회장의 주가 조작 논란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며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다라는 게 내부의 평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건강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23일~24일자 신문 쉽니다.



▲尹, 다보스 ‘한국의밤’ 참석… “인류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 /사진 뉴시스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세금 감면도”

▲김기현, 경기 당협위원장 30여명과 만찬… 43명 지지 결의  
▲이재명, 방공부대 장병에 “더 나은 처우·환경 만들 것”



▲민주, 전대 앞둔 與에 “분열 막장드라마… 국민 외면할 것”  
▲보수첫발 대구 서문시장 찾은 안철수 의원 /사진 뉴시스